

행 정 학

해설위원 : 김덕관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①	④	②	②	③	①	②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①	①	①	④	③	④	③

▶ 출제영역 분포

단원	문제수	단원	문제수
행정학총론	6	재무이론	2
정책이론	5	행정환류	1
조직이론	1	전자정부론	-
인사이론	2	지방자치론	3

▶ 문제분류 및 실력진단기준

기출문제	16	생소한 문제	4	100점 방지	0
------	----	--------	---	---------	---



실질적인 만점: 100점

고득점: 90점 이상

분발대상: 70점 이하

기출문제를 좀 더 어려운 형태로 변형시킨 문제와 생소한 문제가 평균적인 시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기출문제 회독수가 부족하고 중요한 출제포인트의 정답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은 점수가 크게 미끄러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별 빈출됐던 개념과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을 소거해 나갔다면 80점 이상은 수월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조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생소하지만 예측가능했던 문제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인 정부의 조직개편 문제를 맞췄다면 90점 이상도 가뿐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수험생들의 실력에 대한 변별력을 잘 갖춘 문제입니다. 9급 시험과 다른 7급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이 정도보다 쉽게 출제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와 문제조합이 수험생들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이도와 문제조합을 가졌을 때 수험생 여러분들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16문제부터 일단 맞춰서 80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맞춰서 얻는 기본점수 없이는 고득점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혹시 내가 못 본데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에 기본서를 구석구석 다 찾아보신 분들은 점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2순위는 모의고사를 활용하여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지만 예측가능한 주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푼다고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고 풀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여 구멍을 찾아 채우고 가끔 섞여 있는 생소하지만 대비해야 하는 이론을 골라 챙겨야 점수로 연결됩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에서 여기까지만 충실히 하셔도 90점 이상은 거뜬합니다. 물론 1순위인 기출문제를 항상 공부의 중심에 놓기 바랍니다.

▶ 문제 및 해설

-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②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③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④ 행정예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바 있다.

<암기용 해설>

-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 차등조정의 원리: 최소극대화 원칙 = 최대최소(maximin) 원칙

<이해용 해설>

- ① (X) 롤스(Rawls)의 정의의 제2원리 중 하나인 차등조정의 원리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으로 이는 가장 취약한 집단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최대최소(maximin) 원칙이라고도 한다.
② (O)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는 인간이라면 확보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관련된다.
③ (O)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 이론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된다.

2. 로즈(Rhodes)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② 이슈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③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유사하며,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암기용 해설>

-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유사하며,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 정책네트워크: 참여자간 상호작용 ⇨ 정책과정의 동태성 ⇨ 예측이 어려움

<이해용 해설>

- ④ (X)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모형으로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 정책과정은 동태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정책산출 또한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예측하기 어렵다.

- ① (O), ② (O), ③ (O)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 동기는 각 행위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공동체는 자원보유 정도가 유사한 참여자들이 서로 자원을 교환하며 협력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비교적 폐쇄적·안정적·지속적인 정책네트워크 유형이다. 이에 비해 이슈네트워크는 자원보유 정도가 상이한 참여자들이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적은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④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암기용 해설>

-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 1회 100만원 초과 ⇨ 형사 처벌

<이해용 해설>

- ②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4. 라스웰(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 ③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④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암기용 해설>

-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 ▶ 라스웰(Lasswell)의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경험적·과학적 지식

<이해용 해설>

- ② (×) 라스웰(Lasswell)은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에서 일차적으로는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책연구는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을 지향해야 한다. 이 중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인 증명을 통한 과학적 지식을 의미하고, '정책에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는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 ① (○), ③ (○) 라스웰은 일차적으로는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학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의사결정 또한 사회적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의 맥락과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이해된다.
- ③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등 다양한 책임성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암기용 해설>

- ③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 신공공관리론의 정부역할: 시장의 집행에 대한 방향잡기
신공공서비스론의 정부역할: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이해용 해설>

- ③ (×)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이다. 정부는 시장의 효율적인 집행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steering)의 역

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시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6. 조직효과성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 ① 개방체제 관점
- ② 내부과정 관점
- ③ 인간관계 관점
- ④ 합리적 목표 관점

<암기용 해설>

- ① 개방체제 관점의 목표: 성장 및 자원획득

<이해용 해설>

- ① 킨(Quinn)과 로보그(Rohrbaugh)의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효과성 측정관점 중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을 목표로 하는 관점은 개방체제 관점이다.

7.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암기용 해설>

-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 ▶ 소방청: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속
-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 ▶ 환경부로 수자원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에서 빠짐

<이해용 해설>

- ㄴ (×)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에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두고 있다.
- ㄷ (×)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이원적으로 수자원 관리를 해오던 것을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8.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 ① 주민소환제
- ② 조례제정개폐청구제
- ③ 주민투표제
- ④ 주민소송제

<암기용 해설>

② 주민참여제도 시행 순서: 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감사청구 ⇨ 주민투표 ⇨ 주민소송 ⇨ 주민소환 ⇨ 주민참여예산

<이해용 해설>

②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되어 시행된 제도는 조례제정개폐청구와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 그 이후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순으로 도입되었다.

9.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암기용 해설>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 주민: 주민투표 청구 ⇨ 단체장: 주민투표 발의

<이해용 해설>

③ (×) 주민은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단체장이 이를 발의하여 실시한다.

10.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 ② 미국 태프트위원회에서 사용한 절약과 능률은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 ③ 브라운위원회에서 제시된 능률적인 관리활동은 POSDCoRB로 집약된다.
-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New Deal)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암기용 해설>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New Deal)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정치행정위원론): 세계대공황과 뉴딜정책 이후 정치행정위원론의 등장으로 쇠퇴

<이해용 해설>

① (○), ② (○), ③ (○) 1930년대 이전 미국 행정학은 행정을 정치와 분리하여 능률에 기초한 관리로 행정의 기능을 국한시킨 정치행정위원론이었다. 과학적관리론의 '절약과 능률'이라는 가치 기준과 행정관리론의 'POSDCoRB' 또한 마찬가지이다.

④ (×) 정치행정위원론인 1930년대 이전 미국의 주류행정학은 1930년대 이후 세계대공황의 발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으로 인해 쇠퇴하였다. 세계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중심의 가치배

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이 가치판단과 결정이라는 정치적 기능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정치행정위원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암기용 해설>

①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포자 모형: 환경의 중요성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 이슈관심주기 모형: 이슈 자체에는 생명주기가 없음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 정책흐름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 가정

<이해용 해설>

① (×)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어야 정책의제설정 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② (×)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관심에 의해 이슈의 주기가 변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③ (×)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이 정책의제설정에 적용된다고 본다.

④ (○) 동형화 모형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강조한 제도적 동형화에 의해 정책전이가 나타난다고 본다. 그 유형으로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가 있다.

12.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문제에 대한 통계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어렵게 한다.
-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 ③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경제제일주의는 많은 노동문제를 정부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하였다.
- ④ 정치체제의 가용자원 한계는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암기용 해설>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 문제해결의 편익 분산, 비용 집중(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의 해결) ⇨ 정책의제설정되기 어려움

<이해용 해설>

② (×)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해결의 편익이 사회전체적으로 분산되고 비용은 일부집단에 집중된다. 이러한 경우 비용부담집단만 조직화하여 반대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제설정이 어렵다.

13.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암기용 해설>

-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 성과주의 예산 > 신성과주의 예산

<이해용 해설>

- ① (○), ③ (○), ④ (○) 신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이 아닌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한다. 이는 예산운용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집행 과정에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예산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② (×)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 구조와 회계제도 등이 대폭 변화하였다. 이에 비해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도입 전부터 프로그램 사업 구조와 회계제도 등이 성과측정에 용이한 방식으로 계속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은 아니었다.

14. 행정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 ②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 ③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능력을 포괄한다.
- ④ 행정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요인들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암기용 해설>

-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 ▶ 행정능력: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 정치적 능력

<이해용 해설>

- ① (×), ② (○), ③ (○) 현대행정에서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능력도 당연히 포함한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는 능력이 정치적 능력이며, 이를 위한 전문성 및 창의성이 지적 능력이고,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 리더십, 동기부여 등 정책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능력이 실행적 능력이다.
- ④ (○) 정치적 능력,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결정이어도 예산이나 기술 부족 등으로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5. 정책의 유형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로위(Lowy)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 ③ 로위(Lowy)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 ④ 로위(Lowy)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암기용 해설>

-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 ▶ 추출정책
- ③ 로위(Lowy)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 ▶ 구성정책
- ④ 로위(Lowy)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 ▶ 로위(Lowy)의 정책분류는 상호배타적이지 못함 ⇨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곤란

<이해용 해설>

- ① (○) 로위의 정책분류는 다원주의적 관점이 강한 분배정책과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강한 재분배정책뿐만 아니라 그 중간영역에 있는 규제정책과 구성정책으로 정책을 분류하여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② (×) 알몬드와 파우얼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 정부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은 추출정책이다.
- ③ (×) 로위는 행정기관, 군대 등 정부조직을 운영하는 필요한 경비 또한 구성정책으로 보았다.
- ④ (×) 로위의 정책분류는 네 가지 유형 간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상호배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각 정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즉 측정하기 쉽게 정의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6. 성과평가의 방법과 모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 ㄴ. 성과표준평정법(Performance Standard Appraisal)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을 명시한다.
-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 ㄹ. 행태관찰평정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암기용 해설>

-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 ▶ 목표모형
-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 ▶ 균형성과평정(BSC): 재무, 내부과정, 고객, 학습과 성장 관점의 균형

<이해용 해설>

- ㄱ (×)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 즉 목표달성도를 중시하는 모형은 목표모형이다. 논리모형은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 ㄷ (×) 균형성과평정법(BSC)은 재무, 내부과정, 고객, 학습과 성장 관점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과평가방법이다(다만,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는 고객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

17.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 ②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 ③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암기용 해설>

-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 현대행정: 정부와 민간의 협치 ⇨ 거버넌스

<이해용 해설>

- ④ (×) 현대행정의 활동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와 함께 수행하는 거버넌스를 기초로 한다.

18. <보기>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총액계상제도	ㄴ. 이월
ㄷ. 전용	ㄹ. 이월제도
ㅁ. 계속비제도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 ③ ㄹ, ㅁ, ㅂ ④ ㄴ, ㄹ, ㅁ

<암기용 해설>

- ㄹ. 이월제도: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
- ㅁ. 계속비제도: 한 회계연도를 넘는 사업에 대해 5년까지 계속비로 승인
-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이해용 해설>

- ㄹ. 이월제도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예산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이다.
- ㅁ. 계속비제도는 한 회계연도를 넘는 사업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액과 연부액을 계속비로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예산 사용을 승인해줌으로써 예산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이다.
- ㅂ.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이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최소 회계연도 다음 연도부터 채무를 갚는 제도이다. 회계연도 이후에 채무를 갚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완화된다.

19.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객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 ③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암기용 해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 자율적 책임성

<이해용 해설>

- ④ (×)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은 자율적 책임성이다. 제도적 책임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외부에서 처벌하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책임성을 확보한다.

20.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시장의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서울시장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위 ③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암기용 해설>

-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기간: 15일 이내

<이해용 해설>

- ③ (×) 이행명령을 받은 단체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